'만 6세 1·2월생' 따돌림 때문에…

제때 취학 안한다

광주·전남 취학유예 매년 늘어

취학연령이 됐는데도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는 이른바 '취학유예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초등학교 취학유예자는 취학연령은 됐지만 같은 학년 아동보다 생년이 느린 다음해 1, 2월 출생 아동에 집중되어 있다.

결국 '왕따'를 우려한 부모들이 제 나이에 학교를 보내는 것을 기피하고 있고, 이같은 기피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07년도 광주지역 초등학교 취학유예자는 2천760명. 전체 의무취학 대상자 2만2천335명의 12.4%에 달했다. 2007학년도 의무취학 대상자는 2000년 3월 1일부터 2001년 2월 말에 태어난 아동들이다.

광주지역 취학유예자 중 2001년 1, 2월생이 2천537명을 차지해 전체 취학유예자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취학유예율도 크게 늘고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2006년 의무취학 대상자 2만2천988명 중 2천656명(취학유예율 11.6%) ▲2005학년도 2만2천875명 중 2천150명(9.4%) ▲2004학년도 2만3천724명 중 2천174명(9.2%)이 초교 입학을 미뤄 취학유예자가 꾸준히 증가했다.

전남도의 2007년도 취학유예자는 2천718명. 의무취학 대상자 2만5천183명의 10.8%였다. 전남지역의 경우도 취업유예율이 2004년도 7.0%, 2005년 7.7%, 2006년 10.0%로 증가했다. 전남지역도 2007년 1,2월생이 90% 이상이었다.

취학유예자 중 1, 2월생의 비율이 압도적인 것은 나이가 한 살 많은 아동들과 함께 공부했을 때 학업이 뒤처지거나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학부모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조기유학이나 가정 형편을 이유로 미취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수에 불과하다.

이같은 제도적 문제점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 같은 나이의 학생들이 같은 학년에 공부할 수 있도록 2009년도부터 취학기준일을 3월 1일에서 1월1일로 변경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폴리스라인 넘는 시위대 전원 연행"

경찰청, 현장 검거 위주로…전기충격기 사용 등 검토 논란일 듯

경찰청이 '폴리스라인'(경찰 저지선)을 넘는 시위대를 전원 연행하는 등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대응 방식을 현장 검거 위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대선에서 보수정권인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비해 집회와 시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경찰의 이같은 강경방침이 경찰과 시위대간 물리적 정면충돌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시위대와 직접 물리적으로 맞닥뜨리는 현재의 시위 대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방향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경찰은 대규모 집회·시위 현장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되 후방에 7~8명 규모의 검거조를 배치해 이를 넘어서거나 1차 저지선을 뚫고 들어오는 시위 참가자를 연행한다는 것. 이와 함께 시위 현장에서 심한 폭력을 휘두르는 참가자에 대해 전기충격기·최루액·물대포 등을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고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요구한데다 최근 수년간 시위대와 경찰이 직접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 시위 대처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런 새로운 방침을 반영해 집회·시위 대응 매뉴얼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내부 검토와 현장 점검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구상이 현장에서 실행될 경우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실행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일부 시위대가 우발적으로 폴리스라인을 침범했다가 연행될 경우 나머지 시위 참가자들이 흥분해 시위가 격화할 우려가 있으며, 연행 시도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자칫 대규모 시위대에 밀려 폴리스라인 자체가 허물어질 경우 제한된 수의 검거조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지금도 불법폭력 시위 참가자를 현장에서 검거해 사법처리하는 것을 명목상 원칙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과감히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우려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광주와 전남에서는 각각 143건, 235건의 집회 및 시위가 있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효사랑 떡국 맛있네" 14일 낮 광주시 남구 월산2동 경로당에서 열린 '효사랑 떡국 나눔행사'에 참석한 노인들이 떡국을 먹고 있다. 월산동 새마을 부녀회는 매년 1월 사랑의 떡국을 만들어 노인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

〈7409〉 김종두

카메라 설치 불법 성매매업소 '덜미'

쌍나팔

○…건물 내에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해 놓고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들이 경찰에 덜미.

○…광주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4일 성매매 영업을 해온 천모(34)씨 등을 성매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동업자 변모(34)씨와 성매매 여성 및 성매수 남성 등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광주시 서구 치평동에 'H허브샵'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밀실 8개를 설치한 뒤 성매매 여성 6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

○…천씨는 지난해 7월 경찰에 단속에 된 뒤 건물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배짱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성범죄 부른 인터넷 채팅

초등생 성폭행·여중생 성매매 강요 2명 검거

전남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4일 가출한 여중생을 유인한 뒤 성매매를 강요한 A(21)씨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가출 여중생 B(14)양과 만나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접속한 성구매 남성 10여명에게 1회당 10만원씩을 받고 B양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뒤 화대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서부경찰도 이날 가출한 소녀를 성폭행한 강모(26)씨를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강씨는 지난 7일 밤 10시15분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에서 C(11)양과 C양의 남동생(8)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불법 조업 꼼짝마! 목포해경 3천t급 함정 배치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강평길)는 서남해 밀수·밀입국 등 해상사범과 배타적 경제수역 내 불법조업 중국 어선 단속을 위해 3천t급 대형 경비함정이 배치됐다고 14일 밝혔다.

'태평양 8호'〈사진〉로 명명된 이 경비함은 길이 110.8m, 8천 8백마력의 기관 2대가 설치돼 있어 최대속력 21노트로써 최신 위성 항법장치, 위성통신장치는 물론 1만t급의 대형 선박을 예인할 수 있는 구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태평양 8호는 국내기술진에 의해 설계돼 (주)한진중공업에서 건조됐으며, 초고속 구조정 2대와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조난자 수용시설과 쾌적한 주거 공간 및 최신시설의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다.

태평양 8호는 초대 함장 박정수(52세) 경정의 지휘 하에 오는 21일부터 2주간의 취역훈련을 마친 뒤 본격 배치된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광주 한나라당사 경비 '발등의 불'

10년만의 정권 교체 따라 북부경찰 인력 증강 검토

한나라당이 10년 만에 집권 정당으로 복귀하면서 경찰의 '경비지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이 됨에 따라 한나라당 당사 앞 집회 및 시위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진 곳은 광주시 북구 중흥동 한나라당 광주시·전남도당을 관할하고 있는 광주 북부경찰서다.

북부경찰은 이명박 당선인이 대선 후보로 나선 지난해 11월26일부터 한나라당 당사 앞에 경찰 수십명을 배치했고, 정보 형사들의 활동도 강화시켰다. 경찰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나라당 당사 경비병력 증강을 검토중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대립과 새 정부 국정 방향에 대한 학생·재야·진보단체의 시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북부경찰 관계자는 "김대중 정부 출범 이전까지만 해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거의 매일 밤을 새우면서 시위에 대비했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예전처럼 과격·기습시위가 많지는 않겠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비 인력을 재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